

의안번호

제 622호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8. 4. 11(금) · 김영길 의원 외 2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8. 4. 16(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8. 4. 21(월)

### 2. 제정이유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함.(안 제3조)
- 나.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다. 구청장은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

부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

#### 4. 근거법규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4조

나. 노인복지법 제1조, 제4조

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2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마. 의료급여법 제3조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3조

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액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현재 우리구에는 1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008년 3월말 현재 약 835여명이고 연간 지원액은 약 5,900만원 정도이나 대상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재원을 순수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 【참고자료】

## 1. 울산광역시 구군별 저소득층 월 보험료 10,000원 미만 세대 현황

## 《 중 구 》

2008.3.31 현재(단위 : 세대, 원)

지원대상	지원예상 세대 (월)	지원예상 보험료(월)	연간지원 예상액	비고
계	835	4,918,370	59,020 천원	자격변동에 따라 수 동될 수 있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503	2,760,480		
한부모 세대	45	365,580		
등록장애인 세대	287	1,792,310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 건강보험료 월 10,000원미만 전체 세대 : 2,268세대 12,163,210원

## 《 타 구 》

- ▶ 남 구 : 909세대 : 5,141,430원,
- ▶ 동 구 : 463대 2,623,570원,
- ▶ 북 구 : 321대 1,719,660원
- ▶ 울주군 : 1,196세대 6,291,910원

## 2. 울산 타군·구 지원조례 제정현황

- ▶ 울주군 : '06.12.21 의원발의  
-시행일 : 2007. 7. 1
- ▶ 동 구 : '07.10.23 의원발의  
-시행일 : 2007. 7. 1(예정)

※ 전국자치단체 조례제정 수 : 90개 자치단체

## 3.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현황

2008. 4. 14현재

지원대상	자 치 단체수	지원 자치단체
계	90	
◦ 65세이상 노인세대	43	서울중구, 양천구, 송파구, 서초구, 부산중구, 사하구, 동래구, 영도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서구, 남구, 북구, 오산시, 파주시, 춘천시, 원주시, 삼척시, 동해시, 충북영동군, 충남예산, 전주시,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보성군, 구례군, 강진군, 영양군,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영덕군, 예천군, 군위군, 울진군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6	서울종로구, 평창군, 인제군, 옥천군, 홍성군, 음성군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모·부자세대	21	서울관악구, 부산남구, 인천계양구, 서구, 울산동구, 울주군, 안양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아산시, 논산시, 충주시, 영광군, 영천시, 구미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고성군
◦ 65세이상 노인세대 ◦ 모·부자세대 ◦ 조손세대	1	대구달성군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모·부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3	서울중랑구, 구리시, 사천시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모·부자세대 ◦ 조손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	10	부산서구, 강서구, 강릉시, 양구군, 청주시,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 차상위계층	6	인천남구, 동구, 옹진군, 태백시, 정선군, 의성군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적용기준

- 월 보험료 5천원 미만(7개) : 부산서구, 중구, 동래구, 광주북구, 의성군, 영덕군, 강진군
- 월 보험료 6천원 미만(3개) : 인천남동구, 서구, 울진군
- 월 보험료 7천원 미만(1개) : 인천계양구
- 월 보험료 8천원 미만(1개) : 인천 동구
- 월 보험료 10천원 미만(78개)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8.4.]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4.18>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인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7.1〉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4. 기타소득

-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2007.8.3, 2008.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②삭제 <1999.10.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조 (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2006.10.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62조 (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⑥삭제 <2006.12.30>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